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41호 | 2024년 11월 29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및 시사점

김은옥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요약》

#### ■ 미국의 대중국 인식 변화

- 미국 조야의 초당적인 대중국 위협 인식은 ‘대중 관여정책의 실패론’에 근거
  - 1972년 닉슨의 중국방문으로 시작, 1980년 개혁개방정책 지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확대된 관여정책은 중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것
  - 트럼프 1기 미국의 대중정책은 관여정책에서 ‘적대적 무역(adversarial trade)’ 개념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경쟁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책 전환의 출발점은 대중 무역불균형 확대

#### ■ 트럼프 2기 대중정책 전망

- 대중 견제정책 기초가 강화되는 가운데 1기보다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추진될 전망
  - 트럼프는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매기고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철회하며, 멕시코 등에서 우회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
- ‘대만 이슈’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대만에 대한 미국 억제력 약화될 가능성
  - 중국은 미국의 대만 관여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에 주목, 양안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
-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며 군사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정책 추진

#### ■ 시사점 및 제언

-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이념·가치 편향이 아닌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외교전략 대전환
- 트럼프 2.0 시대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마련
  - 산업별 보호무역주의 표적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될 것인바,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적 관세 부과에 대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외교전략
  - 국내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과 다원화’ 방안 마련 및 美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대응
  -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에서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가별·산업별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중국정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 대응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바, 해당 품목 대체재 개발, 수급 다각화 등 필요
- ‘다자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AI 등 미중 신흥 기술패권 의제에서 외교 역량 발휘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 트럼프 2.0 시대 국제질서 영향

### ○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

- 트럼프 2기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추구하는 가운데 Make in America 정책을 강화할 것
  -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거래주의적 접근이 핵심
  -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동맹국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 부과,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기,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한 무역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1기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산층의 부활과 제조업 활성화’가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고 여길만큼 국내 정치경제는 중요한 문제
  - 트럼프는 ‘모든 필수품의 100% 미국 내 공급망 확보’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를 지킬 것을 공약
-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세계경제 성장이 위축될 우려
  -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취임 즉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 관세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함
  - ※ IMF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규정, 이로 인해 글로벌 GDP가 2025년 0.8%, 2026년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트럼프의 귀환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건설된 ‘규칙기반 국제질서의 종언’을 의미
  - 트럼프 2기 미국은 기존 국제질서 규범력을 약화시키고자 할 것인만큼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가할 것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재점화하고 대중 경제정책에서 전면적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중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미국 내 반중 여론의 급속한 부상에 기인함
  -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24.5월), 미국 시민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81%로 최고수준을 기록, 미중 대립이 본격화되기 직전(’18.5월)의 59%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것
- 트럼프 2기의 대중 정책은 반도체 수출통제나 해외투자 규제 조치 등을 취한 바이든행정부와 대중 견제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다만 접근방식에 있어 차이
  - 바이든의 디리스킹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면서도 적절한 대화를 통해 관리하는 전략이었다면, 트럼프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연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
  - 트럼프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무역법 301조 외에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대중 견제의 제도화’가 마련된 상태
- 아울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최우선 전략목표는 ‘중국 견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남중국해 통제를 저지하고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바, 이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은 지속될 전망

## 2. 미국의 대중국 인식 변화

### ○ 미국 조야의 초당적인 대중국 인식은 ‘대중 관여정책(engagement)의 실패론’에 근거

-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시작하여 1980년 개혁개방정책 지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확대되어 온 대중국 관여정책은 실패했다는 것
  - 대중국 관여가 중국을 개방된 체제와 민주주의 질서 순응 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힘만 키워 오늘날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만들었다는 평가
  - 이러한 대중 인식은 민주당·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조야의 광범위한 인식으로 공유됨
-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은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에 근거한 것
  - 개입과 포용을 통해 중국을 개방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면, 중국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국가로 전환되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responsible stakeholder)이 될 것이라는 인식
- 그러나 중국은 일당독재와 고도의 경쟁력을 겸비한 경제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미국을 위협
  -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에서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수록 중국이 경제성장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었다”고 비판<sup>1)</sup>

### ○ 오바마-후진타오 정부 시기까지 대체로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쟁을 유지하던 미중관계는 중국의 공세적 부상 이후 변화

- 탈냉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수사를 유지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사회에서 미국 영향력이 크게 쇠퇴하면서 중국은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신감
-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중국몽(中國夢)’ 비전을 천명한 시진핑 집권 이후 워싱턴 당국자들의 대중 인식 전환과 견제가 시작됨
  - 2000년 중국경제는 미국경제의 12% 수준이었으나 2014년 60%까지 추격하였고,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2위 수준의 국방비 지출<sup>2)</sup>
- 다만, 중국과의 직접 마찰을 우려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소극적이었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도 중국과 군사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한적 추진

###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이자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규정

- 2017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미중관계가 이전의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전략적 경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공식화
  - 2020년 5월 대중국 정책방향 보고서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공개, 중국에 대해 압박과 봉쇄전략 등 ‘경쟁적 접근을 하겠다’고 천명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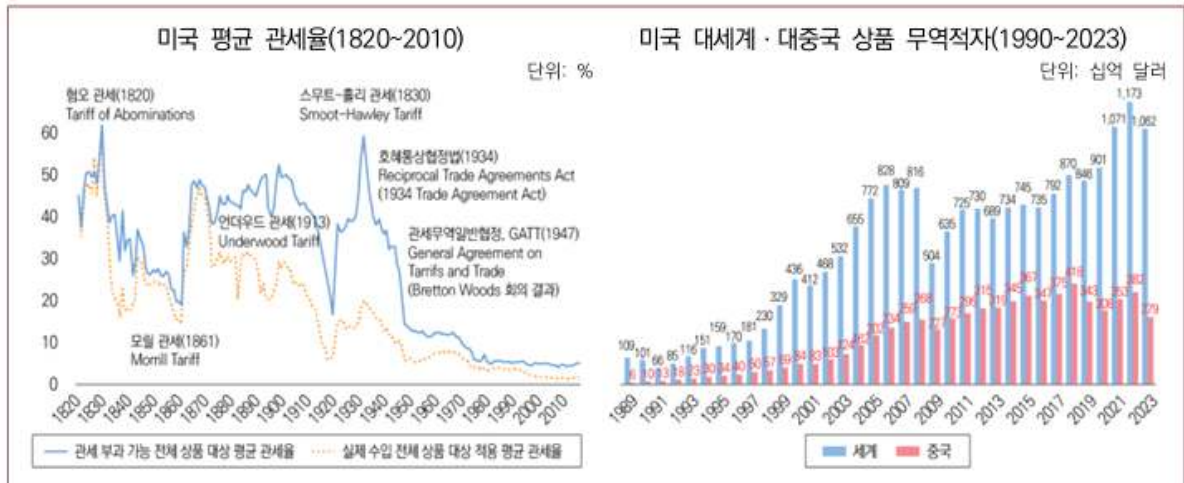
1) 존 미어샤이머, 이춘근 역,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 김앤김북스, 2021.

2)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SS)가 발간하는 Military Balance에 따르면, 2023년 미국 국방비는 9,000억 달러, 중국 국방비는 2,195억 달러를 기록함. 외교부 경제안보센터, 경제안보연구동향(2024.2.23.)

3)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0, 2020).

- 트럼프 집권이후 미국의 대중정책은 관여정책에서 ‘적대적 무역’ 개념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경쟁 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책 전환의 출발점은 확대일로의 무역불균형<sup>4)</sup>
- 트럼프 1기 무역정책의 핵심인물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의 경제정책 조작, 노동 및 환경 남용 등에 의한 것이며, 이전 정부들이 ‘공정한 경쟁의 장’ 만들기 없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탓이라고 비판<sup>5)</sup>

<그림 1> 미국의 장기 평균 관세율 및 대세계·대중국 상품 무역수지 적자



자료: 정은미외,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KIET 산업경제이슈 제173호(2024.10.7.)

- 트럼프 1기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전쟁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분야로까지 확대
- 2018년 7월 미국은 중국 상품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동일 액수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 이후 미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됨
- 양국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휴전상태로 돌입

## ○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디리스크(de-risking)’ 방침을 공식화

- 중국을 미국의 최대 안보 도전으로 인식하는 美 의회 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강경 기조는 지속
- 바이든정부 중국 견제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목적
- ※ 바이든행정은 트럼프 1기에 도입한 301조 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5월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에 대해 큰 폭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등 추가 관세 부과
- 다만 바이든행정은 중국과의 전면 단절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디리스크 전략’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 범위를 ‘첨단기술 및 핵심 분야’로 명확히 함

4)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20.2%에서 48.1%로 상승함. 손열,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의 균형: 미중 경제전쟁의 경우”, EAI 워킹페이퍼((2024.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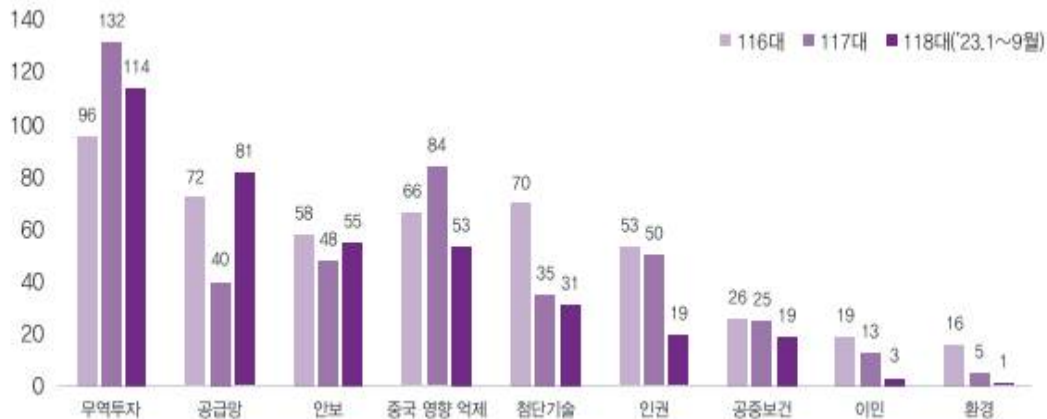
5) Lighthizer, Robert. *No Trade Is Free: Changing Course, Taking on China, and Helping America's Workers*. Northampton: Broadside Books. 2023.

### 3. 트럼프 2기 대중정책 전망

#### ○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 의회는 대중 견제정책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토대로 전방위적 중국 견제 법안들 추진
  -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회기 시작과 동시에 대중국 정책에 초점을 둔 ‘중국 특별위원회’ 설치
  - 트럼프 2기에서도 의회가 대중국 압박에 앞장서는 가운데 행정부와 같은 보조를 취할 가능성

<그림 2> 美 의회 발의 중국 관련 법안 수 추이



자료: 무역협회, “미 의회 대중국 입법동향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2024.6.10)

- 트럼프의 중국 관련 공약은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회, 중국산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수입의 단계적 중단,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포함

#### ○ 트럼프 2기는 ‘무역·통상 분야’에서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며, 1기보다 전면적인 ‘디커플링 (de-coupling)’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관세의 열렬한 신봉자’를 자처해 온 트럼프는 대중국 압박수단으로 관세 인상애 주력할 것
-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를 위해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고, 1980년 이후 부여했던 중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함
  - 중국 최혜국대우를 골자로 하는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 박탈의 법제화 노력 본격화할 가능성
  -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무역협정인 USMCA가 중국의 우회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 2026년 재협상에서 멕시코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힘
-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소비자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미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인만큼, 실제 관세는 현실적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
  - TD Security는 10%의 보편관세 부과 시 물가는 0.6%~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민정책과 결합 시 미국 경제성장률을 1~2% 낮출 것으로 전망<sup>6)</sup>
-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중국이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에서 맞대응할 가능성

6) The Wall Street Journal, “Spector of Trump Tariffs Over Markets”(2024.8.18.)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행정부의 추진한 반도체와 AI 등 핵심산업 중심의 선별적 제재를 전방위적 제재로 확대할 가능성
- 바이든행 정부는 반도체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급망 재편, 투자제한 등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

〈 표1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 전망

구 분	트럼프 1기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반도체 수출통제	· 화웨이 수출통제 (2019.5)와 함께 FDPR (해외직접제품규칙) 적용 · SMIC 수출통제 (2020.12)	〈 반도체 제조시설 〉 · 디램 18nm이하, 디램 128단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내 제조 시설에 적용 〈 AI 반도체 〉 · 거의 모든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중국수출 금지	〈 이차 제재 확대 〉 · 트럼프 2기는 FDPR(해외직접 제품규칙) 확대 적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 통제대상 반도체 추가 〉 ·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았던 통제도 나설 가능성
해외투자 규제	· 인바운드 투자: FIRIMA(외국인투자위험 조사현대화법) 제정	· 아웃바운드 투자: 행정명령 14105 통해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 큰 방향의 변화 없겠지만 향후 이차제재로 확장될 우려
관세	· 1~4차에 걸쳐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 301조 관세 한차례 더 강화 (2024.9)	· 대중국 관세 60%로 상향

자료: 강구상외,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2024.11.7.)

## ○ 대중국 압박에 대만 이슈를 활용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대만 방어’에 대한 모호한 입장은 대만 해협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가능성

- 중국이 대만주변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해협’ 위기는 미중간 가장 큰 위험요인
- 미국은 1978년 중국과 수교한 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왔지만 2017년 트럼프 집권 이후 이를 흔들면서 대만문제를 대중 압박 카드로 활용
  - 2016년 대선 직후 트럼프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했으며, 이는 1979년 이후 美 대통령이 대만 지도자와 직접 통화한 최초의 사례
-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를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트럼프의 대만 수호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
  -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100%를 (대만이) 가져갔다”면서 “대만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은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만 관여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에 주목, 양안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
  - 중국은 3대 핵심이익으로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내세우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는 핵심이익 중 핵심이익은 주권 특히 ‘대만문제’라고 강조해 옴
-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군사적 대립이 ‘우발적 충돌’의 위기를 야기하는 상황임에도,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외교 갈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



○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며 군사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

- 트럼프는 2020년 7월 ‘남중국해에서 모든 중국의 영토 주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남중국해를 거치는 해상교통로는 전 세계 해양물류의 약 25%와 원유수송량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경제·군사안보적 가치가 매우 큼
- 남중국해 분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한 지역의 귀속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바, 중국은 2013년부터 회색지대 전략을 통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 불인정 등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를 추진<sup>7)</sup>
- 트럼프 1기 미국 의회는 초당적인 대중 견제정책을 담은 「2019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킴
- 동 법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 증가 등 다양한 중국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남중국해 이슈가 발생할 때 ‘독단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반면, 바이든행정부에서는 아세안 등 ‘지역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하는 대응방식에서 차이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장 시도를 ‘자유의 항행’을 통해 저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은 자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입장인 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

○ 이 같은 트럼프의 대중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을 피하면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이익에 있어 공세적 입장을 취할 것

-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에서 “상호존중(相互尊重),” “평화공존(和平共存),” “합작공영(合作共贏)” 등 3대 원칙 견지를 강조
- 시진핑 주석은 11월 7일 트럼프에게 보낸 축전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미중 양국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양국과 세계에 혜택을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이는 미중관계를 급격히 변화시키기보다 현상 유지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의지로 읽힘<sup>8)</sup>
- 아울러 미국에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를 막는 행보를 멈출 것을 요구
-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과 내수 중심의 ‘쌍순환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기술 자립도를 제고
- 미국의 무역공세에 대해 경제주권 차원에서 대항하면서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수출관리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조하는 제3국 기업을 견제하는 조치
-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올해 4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중국 국내법에 처음 적시
- 한편, 시진핑 정부는 영토분쟁 등 ‘핵심이익’에 있어 공세적 외교정책 추진
- 최근 중국은 센카쿠 주변 정찰 확대나 남중국해 해군 활동 증가, 대만에 대한 공중정찰 등 동시 다발적 영토분쟁 야기

7) 1968년 유엔이 남중국해 해역에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이 촉발됨. 박찬홍,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 국회도서관 현안보고서 2024-22호(2024.10.31.)

8) 성균중국연구소, “미국 대선 분석 특별리포트: 미국 대선과 중국” 연구보고서 2024-04호(2024.11.11.)

#### 4. 시사점 및 제언

-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이념·가치 편향이 아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외교전략 대전환**
  - 트럼프의 귀환으로 미국 대외정책은 가치 중심 외교에서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실리 외교로 변화할 것인 바, 윤석열 정부의 이념·가치 편향 외교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
    - 미중 갈등 국면에서 특정 국가의 선택이 아닌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이슈별 정책적 선택’
  -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위해 ‘다자외교’를 활용하고, AI 등 신흥 기술패권 의제에서 외교 역량 발휘
    - 현재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과 대만, 일본, EU 등의 상호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인 바, 반도체 다자 외교에서 역량 발휘
    -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외교’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캐나다 등 AI 중견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흥기술 외교 전담조직 확보
- **트럼프 2기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마련**
  - 트럼프 2기 보편 관세와 상호무역법 등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
    - 트럼프 대선 캠프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멕시코산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한 바, 산업별 보호무역주의 표적은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될 가능성
      -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자동차산업 적자 등을 이유로 ‘한미 FTA’를 개정할 전례
    - 대미 흑자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무역법 제201조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부과에 대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외교전략 마련
      -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미국의 관련 품목 수입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 제시
    - 미국 등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및 美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대응 필요
  -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의 축소 가능성에 대비, 미국 내 사업 파트너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역의 공화당 의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한국의 대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을 아우르는 경제안보 종합전략 수립
    -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공급망 안정 및 회복력 강화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종합전략 수립
    -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재점검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다원화’를 위한 방안 등 마련
- **트럼프 2기의 ‘대중 견제’ 강화로 중국내 생산시설 유지·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 대한 대책 마련 및 기회요인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

- 미국의 고율관세로 중국경제가 부진하면 중간재 수출을 하는 한국도 직간접적 타격 입을 것
- 중국 내 우리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한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 적극 전달
-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기술패권 전쟁인만큼 핵심 업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정책과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
  -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에서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가별·산업별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조치에 대해 중국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바, 해당 품목의 대체재 개발, 수급 다각화 등을 통해 리스크 예방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될 대중국 견제정책은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모색**
  - 수출통제 등에 따른 반도체 산업 내 중국기업 위축은 국내 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유럽과 미국 등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서의 입지 강화 기회

## ○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인 바, ‘한중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 마련

- 중국은 트럼프 2기 일방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동맹·우방 국가들의 의구심을 계기로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 가운데 중국은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다자주의 주도국을 자처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대선을 앞둔 올해 중반부터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 6월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일방적 비자면제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9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로 1년 넘게 금지해 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점진 재개하기로 함
  - 특히 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국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그동안 상호 주의를 적용해 엄격하게 입국 비자를 관리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 조치임
    - 중국은 한국을 비자면제 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통해 한중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활용